

# 4대 불법 주정차구역 정해놔도 막무가내 '암체 주차' 극성 여전

소화전·버스정류장 주변 등 무시 버젓이 주차... 주말이면 더 심해  
광주·전남 시행 1년 8만여건 신고...공공질서 지키는 시민의식 필요

♯.2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광산동 소화전 앞. 인도쪽 경계석이 빨강색 칠해졌고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라는 흰색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있는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이지만 은색 승용차는 보란 듯 1시간 가까이 주차했다.

♯.지난 31일 밤 김대중컨벤션센터 앞 버스정류장과 소화전이 설치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간은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했다. 주말이면 대낮에도 불법주정차가 심하지만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광주·전남지역 4대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면서 자치단체와 경찰의 지도·단속이 보다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남지역의 경우 일부 시·군에서 여태껏 금지 구간에 대한 표시나 안내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제도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 4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은
- ▲소화전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위

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4대 불법주정차로 광주·전남에 신고된 건수는 8만 4140건(광주 5만 137건·전남 3만 4003건)에 달했다. 4대 불법주정차 지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이다.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목격한 주민이 1분 간격을 두고 위반 사진을 2장 찍어서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관할 공무원은 현장 확인 없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이다.

신고 건수의 78%인 6만 6202건(광주 3만 2996건·전남 3만 3206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완료됐지만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법주정차 차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불만소리가 터져나온다.

광주 5개 자치구의 경우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신고 건수가 지난해 5월 4562건 접수된 뒤 4743건(8월)→5192건(10월)→5042건(12월)→5212(1월) 등으로 꾸준한 실정이다.

지난달에만 코로나19 여파로 외출이 줄면서 3932건으로 줄었을 뿐이다. 최근 1주일 간 지켜본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의 경우 은행이나 약국, 마트 등을 가기 위해 5~10분 주차하는 차량부터 아예 1시간 넘게 장기 주차를 하는 차량들도 쉽게 눈에 띄었다.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이대로라면 1억 2000만원을 들여 광주지역 230곳에 적색으로 경계석을 칠하고 228곳에 주·정차 금지 보조표지판을 설치한 게 의미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전남도 비슷하다. 22개 시·군 중 영암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완료했지만 진도(예산 미집행률 19.58%), 나



2일 오후 광주시 동구 황금동 한 도로. 주·정차가 금지되는 소화전 5m 이내 지역임에도 불법 주·정차가 극성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주(16.43%), 목포(15.51%) 등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영암은 전혀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점 때문에

4대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취지에 운영될 수 있도록 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교통문화혁신원 관계자는 "저렴한 주차료를 내는 공영주차장도 이용하지 않

고 불법 주정차를 하려는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같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와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코로나에 아이 돌보느라 등골 휘는 조부모

고용부 '직장인 가족돌봄' 설문 42%가 부모·친척에 아이 맡겨

코로나19 여파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의 개학이 미뤄지면서 자녀의 '돌봄'을 부모에게 떠넘기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1~19일 사업주와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 9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42.6%가 휴원·휴교 기간 조부모나 친척에게 자녀돌봄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직접 돌봄을 한 것은 36.4%였으며, 긴급돌봄을 활용한 부

모는 14.6%였다. 아이를 직접 돌본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25.7%),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25.3%), 가족돌봄휴가(23.6%) 등을 활용했다.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한 근로자는 평균 4.3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영향으로 분석됐다.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인당 5일, 하루 5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직접 돌봄을 한 것은 36.4%였으며, 긴급돌봄을 활용한 부

모는 14.6%였다. 아이를 직접 돌본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25.7%),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25.3%), 가족돌봄휴가(23.6%) 등을 활용했다.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한 근로자는 평균 4.3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영향으로 분석됐다.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인당 5일, 하루 5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직접 돌봄을 한 것은 36.4%였으며, 긴급돌봄을 활용한 부

모는 14.6%였다. 아이를 직접 돌본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25.7%),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25.3%), 가족돌봄휴가(23.6%) 등을 활용했다.

### 남편 동생 호칭, 도련님 대신 이름 불러도 된다

국립국어원 새로운 언어 예절 안내서 발간 친가·외가 구분 없애고 '광주 할아버지'로

남녀 차별적인 호칭이었던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등은 호칭 대신 이름을 불러도 된다는 내용을 담은 언어 예절 안내서가 나왔다. 국립국어원은 새로운 언어 예절 안내서인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한 실태 조사와 정책 연구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호칭·지칭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을 담았다.

안내서는 반드시 어떤 호칭·지칭어를 써야 한다는 규범적인 틀에서 벗어나 서로 배려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결혼한 여성이 남편 형제자매를 부르던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대신 각자 판단에 따라 다양하게 부르자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즉 자녀와의 관계에 기대어 '○○(자녀 이름) 삼촌/고모' 등으로 불러도 되고, 관계가 친밀하다면 '○○씨'라고 부르거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나보다 서열은 낮지만 나이가 많

은 사람에겐 '-님'을 붙여도 된다고 했다. 가족 간에 나이와 서열이 역전되는 경우에는 호칭이나 지칭 뒤에 '조카님', '처제님', '동서님'처럼 '-님'을 붙여 존중하는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안내서는 친가와 외가의 구분을 없앨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친'과 '외'라는 단어 대신 지역명을 붙여 '광주 할아버지'라고 부르자는 견해다.

국립국어원은 "안내서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는 정답이나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전통적인 호칭·지칭어에 얽매어 굳이 치르지 않아도 될 갈등과 혼란을 줄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산구 주민,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4차 소송도 승소

법원, 167억원 보상액 책정

군 공항 소음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4번째 소송에 참여한 광주 광산구 주민도 정부를 상대로 승소했다.

2일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67억원의 보상액을 책정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화해권고 판결이 지난달 26일 확정됐다.

대책위는 2014년에 이 소송을 4번째로 냈다. 앞선 소송은 2005년과 2007년, 2009년 각각 제기했다. 4차 소송에 참여한 1만 418명 가운데 보상을 받는 인원은 9180명이다.

2017년 8월과 12월, 이듬해 11월 추가 제기한 5~7차 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소송 없이도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피해를 보상받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연합뉴스

"돈 인출도 안했는데..." 감형 요구한 보이스포싱범 항소 기각

○··전화금융사기(보이스포싱) 조직을 도와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려다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감형을 요구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철창행.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지난해 11월 18일 광주지 서구 상무지구 인근 도로에서 보이스포싱 조직에 속

은 피해자가 송금한 1700만원을 인출하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A(53)씨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피해가 커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인출행위가 범행 이의 실현에 필수적이라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